



# 「한반도 시대」를 향한 무역 · 산업 · 자원정책

자료제공 · 산업자원부

- 본 자료는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5단체, 주요 업종별 단체, 산업 · 기술관련 연구소 등과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, 제시된 의견을 종합 ·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
- 국민의 정부에서 4대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이 정립한 경제 틀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산업 · 무역 · 자원 부문의 실물경제정책 근간 자료로 활용될 것임

## I. 최근의 환경 변화와 우리의 과제

### 1. 세계의 변혁과 동북아의 부상

- 세계경제는 지식 · 정보가 주요한 가치창출의 요소로 등장하고 교통 · 통신기술의 혁신으로 문명사적 대(大)변화가 급속히 진전
  - 지식 · 정보가 상품 · 서비스 ·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며 전통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新경제 현상
  - 경제사회의 광역화 ·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Global Standard에 의한 정책 · 제도 · 물적 환경 조성이 필요
- 동북아경제는 역동적인 성장으로 NAFTA, EU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부상
  - 계획경제의 市場경제 전환 성공으로 러시아 · 카자흐스탄이 주도하는 「유라시아경제동맹」형성(00. 10월)
  - 中國경제의 안정성장으로 韓 · 中 · 日의 산업 · 무역협력으로 世界化에 주도적 역할
- 한반도경제는 남북 정상외 6. 15 합의 이후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무역 · 물류의 중심축으로 부상
  -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 · 통신체계가 구축되면서 산업 생산 · 교역 · 물류 · 자원 교류의 핵심거점으로 성장 가능

인류문명사적 변혁을 한민족 응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실물경제의 과감한 전략적 도전이 긴요한 시점

## 2 최근 우리 경제의 모습과 과제

- 「국민의 정부」는 민주주의·시장경제·생산적 복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마련
  - 우리 경제는 98년이후 금년 9월까지 712억달러의 무역흑자와 348억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로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
  - 기업·금융·노동·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마무리  
(기업·금융부문은 연내, 노동·공공부문은 2001. 2월까지)
- 6. 15 남북정상 합의,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및 ASEM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적 위상 제고
  - 남북의 해빙, 민주주의·인권의 신장, 화합에 의한 평화 실현
  - ASEM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 제고
- 그러나 우리에게 밀려오는 内外의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
  - 대외적으로 美國경제의 둔화 우려, 반도체가격 하락, 고유가 지속 등 문제가 대두
  - 국내적으로 주식시장 침체, 금융 불안, 내수 둔화, 사회적 긴장의 해이 등 불안 가중

무역흑자 지속으로 경제 안정화, 높아진 위상을 정보지식기반에 의한 강한 경제 구축의 기회로 활용

## 3 산업·무역·자원정책의 과제

- 외환 안정화와 구조개혁에 성공하였으나, 市場에서는 경기선행지표의 하락, 자금경색의 지속 등으로 불안감이 맴돌고 있음
  - 금년말과 내년 상반기가 경제안정화의 고비이므로 급격한 경기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물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기하강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함
  - 새로운 시스템하에 경제하는 무드 조성, 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
- 재정·금융 정책 중심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실물경제의 동태적 혁신과 구조적 문제 해결이 미흡하므로 지금부터는 실물경제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야 함
  - 선진국 모방과 catch-up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저(低)효율, 저(低)부가가치, 저(低)기술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
  - 설비과다형 중후장대(重厚長大) 産業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부품·소재의 수입의존과 에너지 다소비의

구조적 취약성 상존

\* 부품·소재 수입액(억불) : (98) 436 → (99) 593 → (00. 9) 591

\* GDP의 에너지 탄성치(%) : (98) 1.39 → (99) 0.93 → (00. 9) 0.83

○ 사회간접시설이 편리한 수도권에 과밀화되고 지방은 과소되어 물류비 증가 등 고비용이 유발되고, 지방 경제는 부진

\* GDP대비 물류비(%) : 한국(98) 16.5, 미국(96) 10.5, 일본(95) 9.5

□ 美國·日本·中國 등 주요 국가와의 무역불균형 심화로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무역확대를 제약

◇ 우리 經濟는 내수둔화 전망에 따라 유일한 돌파구인 수출에 총력을 경주하고, 실물부문의 취약성을 시급히 극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,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

## II. 무역·산업 비전과 전략

### 1. 2003년의 비전

한민족 응비의 역사 창조

- 세계 10位 이내의 정보지식기반·선진민주산업국 부상
- 무역 규모 5,000억달러, 무역수지 年100억달러 흑자 정착
- 외국인투자 年 150억달러 수준의 지속적 유치
- 동남아 경제의 중심축 및 한반도의 대륙, 태평양 물류 거점화
- 환경친화적 에너지사용 확대, 자원확보의 다원화 및 에너지 GDP탄성치 0.7% 실현(연간 약 60억달러 소비절약)

### 2. 패러다임의 혁신

산업화 전략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입주도의 量的 성장</li> <li>○ 부문간 불균형 성장</li> <li>○ 선진국 모방산업화</li> <li>○ 개도국형 제도, 정책, 인프라 조성</li> </ul>



정보지식 강화전략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주도의 질적 성장</li> <li>○ 무역·투자의 균형적 성장</li> <li>○ 동북아 및 세계경제에 주도적으로 참여</li> <li>○ 세계표준(GS)의 제도, 정책, 인프라 조성</li> </ul>

4대부문 구조조정 ⇨ 산업혁신적 구조조정(Cross-border Restructuring)

3 새로운 정책방향

◇ 「국민의 정부」의 민주주의·시장경제·생산적 복지의 3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「자율」, 「책임」, 「투명성」을 실현하는 산업·무역·자원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여 선진민주산업국 대열에 진입

-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육성, 투입주도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, 정보·지식·기술·생산성 등 혁신주도의 질적 성장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전통산업·IT·BT의 삼위일체 신산업구조 창조
  - 산업부문에서 안정 속의 개혁,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
  - 전통산업의 정보화, 지식집약화, 고기술·고생산성 실현
  - 「정보」, 「생명」, 「환경」 관련 신(新)산업의 전략적 개발
  - 신(新)산업, 특화산업 중심으로 지방경제 활성화
  - 中小·벤처기업과 대기업간 전략적 제휴 및 연결확대
  - 산업 물동량의 과감한 감축, 부품·소재 공급능력강화, 환경친화 구조화
- 무역·투자정책은 견실한 무역후자기반 정비, 주요국별 산업협력 및 균형적 교역확대
  - 單品 중심 수출에서 상품, 서비스, 문화의 종합적 수출 증대
  - 국제상거래 e-business化, 통상마찰 예방, 수출 채산성 강화
  - 남북교류 촉진, 투자의 전략적 추진
- 에너지·자원정책은 저소비 경제 실현, 자원의 다원화
  -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의 범국민적 추진
  - 동북아 자원공동체 실현 및 공급선 多元化 추진
  - 에너지 생산·유통의 경쟁체제로 구조개혁

■ 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당면대책

1. 무역·투자의 총력체제 구축

◇ 現 상황에서 불확실성 극복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증대 및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실한 돌파구  
 ◇ 금년도 120억달러의 무역후자 및 160억달러의 외국인투자, 내년도 무역후자 100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150억달러 이상을 기필코 달성

- 범국가적인 「무역·투자 총력 추진시스템」구축
  - 산업자원부장관을 주축으로 정부부처, 경제5단체, 업종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상시체제 구축

- 貿易協會 : 수출 애로과약 및 대내의 무역여건 점검
- 全經聯 : 외국인 투자애로 발굴 및 투자환경 개선
- 大韓商議 : 대외 산업협력 강화
- 中小中央會 : 중소·벤처기업 수출 지원

□ 품목별·국가별 「무역 및 투자유치 실행계획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

- 매월 법정부적인 「무역·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대책회의」 개최
- 업종별·국가별·산업단지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책의 적기 시행
- 종합상사, 중견·중소수출업체 등 무역업계와의 간담회 수시 개최 및 수출애로, 외국인투자 고충사항의 신속한 처리

## 2 선진 경영체질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

기업은 투명성·수익성·윤리성 중심의 새로운 경영체질을 구축  
정부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기업환경을 조성

□ 기업의 Global Standard에 의한 선진 경영풍토 조성

- 재무구조 개선 및 투명·책임 경영의 5+3 원칙 철저한 실천
-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경영 체질 강화
- OECD 뇌물방지협약의 준수 및 기업 윤리성 제고

□ 경제주체간 협력 분위기 강화

- 정부는 기업을 신뢰하고, 최대한 창조적 활동여건 조성
-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(통신, 정유 등)에 대응한 업종별·산업별 합병·제휴 환경 조성
- 중소기업·벤처기업·대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

□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기 진작

- 경제5단체의 對정부 4대부문 건의사항(10. 25) 연내 완결
  - 기업구조조정 보완, 법정 준조세 개선, 핵심 규제개혁 및 부품·소재산업 육성 등
- 금융·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, 공장건축, 화물입출항, 환경, 산업안전 등에 대한 규제와 준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
-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국제기준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

□ 유망 中小·벤처기업이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금경색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전방지대책 강구

- 대기업의 어음결제시 불공정 행위 방지
-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고, 유망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民官의 펀드 조성을 확대
- 금융기관의 벤처지원, M&A 활성화 등 市場의 힘에 의해 벤처기업이 다양한 경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
  
-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담당관제(1급 및 국장)를 실시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 분위기를 지방으로 확산
- 중소기업청·산업단지공단 지방조직을 총동원하여 「기업옴부즈만」으로서의 역할을 부여
  
- 기업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보완해 나가고,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애로를 신속히 타개
-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의 흐름이 괴리되지 않도록 경기동향 및 기업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전적으로 기민하게 대응
- 정책자금의 신축적 운용 등 자금조달 원활화

### 3. 기업 구조조정 촉진

◇ 4대부문 12대 개혁과제에 따른 기업 구조개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, M&A 등 시장의 힘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 기반을 구축

- 당면한 기업구조조정을 연내에 완결
  -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되, 업종별 경쟁력 대책을 반영
  - 대기업 사업구조조정과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마무리
  - 업종단체를 중심으로 관련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의 역할 제고
  
- 시장기능을 활용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기반 마련
  -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(CRC)의 원활한 경영여건 조성
    - \* CRC 등록·투자실적(10월말): 51개사(조합 11개), 총 12,634억원(538건) 투자
  - 기업분할, 분사·M&A 제도 등 구조조정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
  
- 세계적인 Mega-Deal과 전략적 제휴에 의한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세계 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역량 강화
  - 전문 분야에의 기업역량 집중화
  - 국내기업간 대형 합병·전략적 제휴 활성화 여건 조성

## N. 정보지식기반의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대책

### 1. 전통산업의 확고한 국제경쟁력 구축

- 정보기술(IT)을 접목시켜 全産業의 e비즈니스화를 정착
  - 2002년까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자, 자동차 등 9개 B2B e-Marketplace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20개 까지 확대
  - 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, 세원노출에 대한 보완조치 등 B2B 세제 지원 확대
- 기술개발부터 생산·유통까지 기업활동 전 과정(Value Chain)에 걸쳐 부가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
  - 전통의 정보화투자모델을 제시하여 情報化 투자의 효율화를 유도하고, 품질·디자인·생산공정 혁신을 유도
- 이미 세계적 수준에 있는 반도체·조선 등 주력산업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世界 최고수준의 산업화 전략을 추진
  - 반도체 : 메모리와 함께 비메모리도 한국 간판 산업화
  - 자동차 : 고연비 기술 확보 등 중·소형차의 세계시장 주도
  - 조 선 : 초대형컨테이너선 등 高부가가치선박으로 세계시장주도
  - 기 계 : 2005년까지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
  - 전 자 : 2005년까지 세계3위의 전자강국으로 부상
- 성숙산업은 고부가가치제품 위주로 경쟁력 강화

### 2 21세기 신(新)산업에의 전략적 도전

◇ 新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선진산업국의 표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

- 정보기술(IT) : 세계적 IT강국의 잠재력 확보
  - 웹서버, 네트워크장비 등 세계시장을 주도할 분야를 집중 지원
- 생물(BT) :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
  - 생물산업 인프라 및 산업화 기반 구축
    - 바이오신물질 안정성평가센터, 기술실용화센터, 핵심기술개발센터 설립

- 생물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자상거래기반 구축
- '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' 제정 추진
- 광(光) : 정보화시대의 기반산업으로 육성
  - 광주를 광기술개발, 기술인력양성 등 광산업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
  - 광기술종합센터 및 포토닉스, 광산업진흥회 등을 조성
- 초전도 : 2005년부터 초기 실용화단계에 진입
  - [초전도 기술개발 종합계획] 수립
  - 초전도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설립, 3대광역 초전도벨트라인구축
- 환경 : 내수 기반 확충을 토대로 수출산업화
  - 청정산업을 위한 환경설비 전문 中小·벤처기업의 육성
  - 4대 핵심환경기술개발 및 우수환경설비에 대한 시장조성 확대

### 3. 中小·벤처企業의 활력 고취

- [IT의 産業化와 전통산업의 IT化]의 주역으로서 기술력 있는 벤처企業이 구조조정과정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
  -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자금 조성 및 투자
  -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구축
    -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등록을 적극 허용
    -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위해 『코스닥위원회』의 독립성 제고
  - 1,000억원 규모의 [중소·벤처기업 M&A 펀드] 결성, M&A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M&A 활성화 촉진
  - 벤처기업의 지방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    - 전국에 [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] 지정·운영(20여개)
    - 민·관 합동 [벤처기업 해외진출 종합지원계획] 수립·추진
    - 해외 [벤처지원센터] 등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
-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자생력 제고
  - 중소기업의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지식집약화 방안 및 기술력 향상 중장기 계획을 수립·추진
  -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보호위주의 정책은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自生力 강화 유도
  - 자산유동화 증권발행 등 중소기업의 직접금융활용 촉진



#### 4.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

- 중소기업의 情報化 경영을 확산시켜 生産性 향상도모
  - [중소기업형 ERP 표준개발지침] 제정,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ERP(전사적자원관리) 도입을 촉진
  -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에 대한 표준규격을 제공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
    -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자금, 병역특례인력 등을 우대 지원하여 정보화 선도기업으로 육성
- 중소기업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활용 능력제고
  - 지역별 정보화 전문가로 [중소기업정보화지원단]을 구성·운영하여 기업현장의 정보화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
  - 전국의 전문대학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, 임직원에 대한 정보화 혁신교육 실시
  - 중소기업이 정부기관, 대학, 연구소 등의 전산설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인큐베이터 사업을 실시
-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구축 강화
  - 민관협력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단지, 아파트공장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디지털화를 지원
    -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, 기업경영 S/W 임대 지원 등
  - 생산·기술, 발주 정보교환 등을 위한 전국 중소기업 홈페이지 사이트 구축 추진

#### 5.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확산

- 아시아 最高水準의 電子商去來 인프라 및 영업환경을 구축
  - 전자상거래 통신인프라의 확충과 전문인력 공급확대
    - 산업단지 등 기업 밀집지역에 초고속망 인터넷서비스 우선 지원
    - e-비즈니스 인력양성 3개년 계획을 수립(2000. 12월)
    - 전자카탈로그·전자문서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 수립·추진(2001. 3월)
  - B2B 솔루션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B2B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
  - 전자상거래 관련단체의 구심력 강화 및 정책건의 기능 제고를 위해 e-비즈니스 기업인 연합회 결성 추진(2000년말)
- e-Marketplace 확산을 통해 기업간·지역간 情報化 격차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
  - 전통산업과 IT산업을 접목한 e-Marketplace 구축 시범사업을 新산업 등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촉진

- 산업단지내 기업의 情報化 등을 지원할 디지털 산업단지를 권역별로 5개 구축(2001년까지)
- 전자상거래지원센터(ECRC)를 활용하여 지방기업의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전폭 지원
- [한·일 IT 협력 이니셔티브] 등 양자간·다자간 전자상거래 협력 강화

## 6. 부품·소재산업의 세계적 공급기지화

- ◇ 수입대체가 아닌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수출상품으로 개발
- ◇ 계열중심에서 개방적인 부품공급방식으로 전환 유도
- ◇ 첨단 상품·소재분야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

- 부품·소재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
  - 수입동향 및 시장·기술동향 분석을 토대로 112개 개발대상 핵심 부품·소재 발굴(8월) 및 개발 착수 (금년중 40여개)
  - 日·獨 등 선진기업과 전략적 기술·투자유치 활동 전개
    - 일본 : 부품·소재 구매사절단 유치(11. 6-9, 40개사)
    - 독일 : 전문연구기관간 자동차설계기술 공동연구 합의(10. 9)
    - 러시아 : 신소재 등 첨단기술분야 산업협력 합의(10. 11)
- 부품·소재산업을 수출주도형으로 專門化
  - 부품·소재 기술개발 예산의 대폭 확충(500억원 → 01년 1,717억원)
  - 폐쇄적 계열중심에서 개방적 부품공급방식으로 전환시키고 부품·소재기업의 大型化·專門化 유도
- 개발된 부품·소재의 시장형성과 안정적 수요기반을 제공
  -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「신뢰성평가·인증 기반구축 3개년 계획」 수립·추진
  - 신뢰성평가 대상품목 확대(현행 12개 → 01년 58개) 및 신뢰성보험공제제도 실시
-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「부품·소재산업발전특별법」을 제정·추진

## 7. 지방산업의 전략적 배치 및 지방경제 활성화

-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혁신역량을 강화하고, 지방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생산적 복지를 구현

-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산업 육성
  - 지자체별 중장기 [지역산업발전계획]의 수립·추진

- 16개 지자체별로 2~4개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
-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수도권 과밀해소의 실효성 제고
- 지역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용이하게 하는 지역혁신시스템(RIS)을 구축
- 지방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One-Stop 지원을 위해 「지역기업혁신지원센터」지정 추진

□ 산업단지 활성화와 전략적 개발 추진

- 벤처빌딩 건립을 계기로 구로 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편
-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디지털화 추진

○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촉진

- 대불공단을 군산자유무역지역과 연계하여 자본재·부품 중심의 외국인 투자 특화단지로 육성
- 지방단지,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·분양활성화·관리체계 개편

□ 地自體가 외국인투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·지식·기술·마케팅 등 종합 지원

8. 지식기반산업 시대를 위한 고급인력 공급체제 구축

- 산자부 유관기관의 인력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급하는 지식기반 교육정보화(케듀넷, Kedunet)을 구축
- 디자인 등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급인력 교육훈련정보를 과정내용별·지역별 DB화
- 디지털가전, 신소재 등 지식기반제조업과 영상, 디자인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종합교육훈련 정보서비스 체제 구축

□ 분야별 전문기술력 양성

- 전자상거래, 사이버무역, 디자인 등 특수 전문분야 교육 확대를 통해 지식기반형 기술인력을 양성
- 주요 업종별 기술대학을 설치하여 인력양성과 산업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
- 시군별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형 기술인력 양성기관 설립

□ 외국 고급·생산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

- 정보통신 분야의 해외 고급인력에 대해 출입국 및 취업허가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Gold Card제도 도입

9. 산업기술 강국 건설 : 작은 나라, 강한 기술

- [선택과 집중]에 의한 강력한 산업기술 드라이브정책 추진

- 정부 R&D를 확대(2002년 일반회계 5%)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되,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산업기술 예산 확충에 중점
- 산업기술지도를 작성하여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공동개발 체제로 전략적 핵심 기술을 개발
- 범정부적 [기술이전·사업화 종합계획]을 수립하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와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
  
- 튼튼한 기술인프라 조성을 통한 기술자립기반 구축과 지역산업발전의 원천을 제공
  - 테크노파크(TP)를 지역별 종합기술지원기관으로 운영하여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
  - 지역기술혁신지원센터(TIC)를 지방 배후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, 전국적 확대를 추진
  - 기술인력·정보 등 기술인프라 확충과 기업조직·세계를 기술혁신 촉진형으로 전환
  
-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동남아 기술기지로 육성
  -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독일·일본·러시아 등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
  -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와 세계적 기업의 연구소의 국내 유치로 동북아 기술거점으로 도약

#### 10. 극한 품질 확보와 디자인 한국 창조

- 세계 최고의 품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극한 품질확보계획(Ultra Quality Access Project) 수립 및 추진
  - 전국 기업을 망라하는 품질경영 추진조직을 구성하고, 품질경영을 확산하여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을 확보
    - 공기업부터 품질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으로 확산
  - 선진경영기법 전파를 위한 품질 향상 경영정보시스템 구축
  - 신규 품질관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과 인력양성 확대
  
-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디자인 선진국, 독자브랜드 수출국으로 발전
  - 디지털환경에 맞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-디자인 아카데미 신설
  - 디자인벤처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디자인 벤처펀드 조성(2004년까지 1,000억 조성 : 정부 250억원 민자 750억원)
  - 전국적인 디자인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별 디자인혁신센터를 설치하고 디자인 종합정보망구축
  - 수출유망품목에 대해 디자인 혁신에서 사업화까지 일괄지원체제를 구축하고, 固有브랜드를 적극 육성

#### 11. 국가표준·규격의 글로벌 스탠다드화

- 최초의 범정부적(19개부처) [국가표준기본계획] 수립을 통해 21세기 선진표준체제 구축

- KS 규격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전자상거래, 지리정보(GIS), 환경,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분야 규격을 확충

\* 국내표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비율 제고 : 현재 14% → 2004년 80%

-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업표준화 계획 등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 · 추진

- 민간주도 표준체계 확립 및 표준화 기술개발 활동을 본격화

- 사내표준 단체표준 → 국가표준으로의 발전을 통해 민간 중심 표준체제 확립

- 반도체, 정보통신, 환경, 신물질 등 차세대 핵심분야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평가 및 표준물질 개발 강화

- 표준물질 : (현행) 252종 → (2004) 500종

- 양자 ·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표준의 국제화에 적극 참여

- EU · 일본 등 주요국가와 상호인정협정(MRA) 체결을 통해 기술무역장벽을 해소

-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다자간 기술위원회(1,000여개)에 적극 참여

- 南北 산업표준 통일화 방안을 강구하여 남북 산업협력의 기반을 구축

## 12.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신물류체제 구축

- 고비용구조의 근원인 낙후된 산업물류체제를 혁신하여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

- 국가물류비의 68%를 차지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업간 공동수송 확대방안 추진

\* 디지털산업단지 시험사업에 공동수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

- 공동집배송단지, 집배송센터 등 기업간 공동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

- 물류기능간 호환성 · 연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물류기기 · 설비의 표준화 사업을 강도높게 추진

- 기존 물류시스템에 IT를 결합하여 물류의 스피드를 제고하는 e-로지스틱스의 구현

- 표준물류바코드, 전자카탈로그 등 물류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고 기업의 물류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원

-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이자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류기반을 확충

- 인천국제공항, 부산 · 광양-목포항 등을 동북아 거점항으로 육성하고 자유무역지역 등의 물류기능을 확충

## 13. 물류구조의 선진화

- 제조 - 물류 - 유통의 공급체인을 정보네트워킹하고 재고 · 배송 · 판매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

공급체인의 효율성을 제고

- 정보화율이 높은 식품·생활용품 부문의 공급체인관리(SCM : Supply Chain Management)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기자재·전자 등 여타 유통부문으로 확산
- SCM 구축의 핵심기반인 표준상품바코드, 판매시점관리정보시스템(POS), 전자카탈로그(EPC) 등을 보급·확산하여 유통산업의 정보화기반을 확충

□ 재래시장, 영세수퍼마켓 등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촉진

- 재래시장 유형별 발전전략 등 구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[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]을 수립·추진
- 중소기업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구매·판매·물류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도록 체인 사업을 활성화

□ 유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[유통산업발전 종합계획]을 마련

- 유통시장 전면개방, 가치지향형 유통산업태의 출현, 인터넷 유통혁명 등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향후 유통업태별 전망과 발전전략을 수립·추진

□ 이와 함께, 기업이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, 마케팅 등 전략적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

#### 14. 견실한 무역흑자기반의 구축

가. 「Totally New Korea」 Project 추진

- 남북화해, 노벨상 수상, ASEM 등으로 상승한 국가이미지를 상품가치·마케팅 전략에 체화하여 10% 이상 부가가치 제고
- 각 부문별 디자인, 소프트웨어, 브랜드 역량 제고로 국가이미지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·추진
- 세계선두를 달리는 HDTV 등 차세대 유망 디지털제품을 KOREA BRAND 이미지 홍보와 연계
- 현재보다 10% 이상 단가를 높이기 위한 상품별·시장별 일등전략 수립·추진
- 이를 위해 기업, 전문연구소, 학계 등 산·학·연이 함께 참여하는 「전략추진단」 구성·운영

□ Win-Win전략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 전개

- 日本 : 시장진출 강화 및 투자유치확대로 불균형 시정
- 中國 : 산업협력 강화 및 전략적 수입 확대 추진
- 美·EU : 통상마찰 예방을 통한 지속적 교역확대기반 구축
- 中東 : 플랜트 수주활동과 병행하여 현지 경제개발에 참여

나.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

□ 대내외 무역지원시스템의 총력가동

- 해외 주요거점에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을 확충하고, 모든 해외 무역지원기관의 역량을 증소·벤처기업 수출지원에 집중 투입
- 무역지원기관 및 단체의 구조혁신을 통하여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에 핵심역량을 집중
- 지방자치단체와 무역지원기관을 연계한 地方수출지원시스템 구축
- 종합상사가 컨트리마케팅으로 상대국의 개발프로젝트를 종합 수행하는 복합무역분야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
□ 전시장·무역인력·사이버무역 등의 물적 기반 확충

- ASEM 회의를 계기로 확충된 물적 인프라를 전시·컨벤션산업의 육성과 문화·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연계
- 무역전시장을 2003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확충하고,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의 강화 등 무역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
- 「Silkroad21」을 日本·中國 무역포털사이트와 연결하여 동북아 Hub 무역사이트로 육성

15. 韓·中·日 산업협력의 강화

□ 日本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

- 한일간 [IT협력 이니셔티브], 벤처분야 협력 등을 통해 양국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확충하면서 FTA 체결 여건은 지속 연구
- 투자촉진협의회 등을 통해 산업협력을 강화하고, 대불 및 진사공단에 일본의 부품·소재기업을 중점 유치

□ 中國과는 기술·지역개발 등을 통해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

- 금년중 양국간 산업기술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HDTV·석유화학·자동차 등 업종별 협의회 개최 추진
- 지난 9월 민·관 합동조사단 활동결과를 토대로 중국 서부 대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[새로운 협력의 場]을 마련

□ 러시아·中央아시아와는 자원 및 물류망 협력을 확대

-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, 나훗뜨카 공단 조성 등 기추진 협력 사업의 성공적 원수와 농업·어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

- 경의선 - 시베리아 철도망 연결을 계기로 「유라시아 경제동맹」과의 협력 강화

### 16. OECD 수준의 외국인투자환경 조성

- 제도적 인센티브에서 나아가 외국기업이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영·생활환경 조성
  - 추진중인 115개 경영·생활환경 선진화과제와 함께 생활·문화 등 각 분야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·추진
  - 투자보장협정·FTA 체결 등 양자·다자간 투자협력기반 확충
  - 『음부즈만』의 기능활성화를 통해 외국기업 사후관리를 강화
- 상품·소재, R&D거점형 투자 등 국내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
  - 일본·독일의 부품·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을 확대(대불, 진사공단 등)
  - 지적재산권, 경영노하우, 인적자본 및 지역 R&D 거점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 강화
  - 프로젝트별 전담관 지정, 맞춤형 사절단 파견 등 200대 전략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전개
- 地自體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유치체제 구축
  -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탄력성 제고, KISC의 지자체 투자유치지원 강화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

### 17. 한반도경제 구축을 위한 南北 균형발전 추진

- 전반적인 남북관계개선 속도와 병행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상호 이로운 방향(Win-Win)으로 단계적 추진
  - 기존 산업협력의 물리적 확대가 아닌 「제로 베이스」에서 새로운 남북산업협력의 틀을 구축
  - 일회적인 수출성 지원보다는 북한경제의 특수성을 감안, 자생력 회복에 초점을 둔 조혈식 산업협력에 역점
-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中長期 산업발전계획을 수립
  - 경쟁력약화산업의 이전보다는 양측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남한경제의 高度化和 북한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
  - 남북한 지역별 여건과 산업특성을 고려, 경제적 보완관계를 극대화하는 「남북산업구조조정·재배치 계획」 수립
  -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당국간 합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을 추진





### 18. 에너지저소비형 경제·사회구조로의 혁신

- 에너지價格 적정화(OECD수준)로 에너지소비의 합리화
  - 가격 조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. 7월부터 2006년까지 6단계로 나누어 추진
  - 가격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중산층·서민층 세금경감, 장애인, 운수업계 등 부담증가계층 지원에 활용
    - 잔여 세수증가분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지원
  
-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의 정착
  - 자발적 협약(VA)제도, 절약시설투자 및 공정개선 등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유도
    - 2003년까지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을 8% 이상 개선
  
  - 기업체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
    - 세액공제 확대(현행 5 → 10%) 및 자금지원 강화 등
  
  - IT, 바이오 등 에너지저소비형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 촉진
  
-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스템 구축
  -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의 활동을 통한 대형건물, APT, 중소기업 등의 조명시설개체, 공정개선 등 활성화
    -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 및 성능인증제 실시
  
  - 에너지절약형 제품·기술의 개발·보급 확대
    - 에너지등급제 및 고효율제품(Energy-Star) 보급 확대
  
  -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
  - 에너지 절약기술 및 대체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·상품화 추진

### 19. 에너지 도입선의 多元化

- 세계 에너지소비 10위(석유도입 4위)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에너지공급 안정화 및 무역수지개선에 전략적으로 활용
  - IEA(International Energy Agency) 가입을 추진하여 회원국과 공동보조를 통해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제고
  - 중동산 석유 도입조건 개선 및 에너지導入先 다변화 추진

- 일부 중동산유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유럽보다 1\$/B 고가 수출
- 한·중·일 3국 석유 共同물류체계 구축 추진
- 에너지도입의 Bargaining Power를 플랜트건설 등 수출과 연계 활용
  - 에너지 수입국별 진출전략 수립, 민관협력위원회 상시운영
- 東北亞 에너지협력의 구체화
  - 東北亞 국가간 가스, 전력 등의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을 南北韓 협력사업과 연계 추진
    - 시베리아, 사할린 가스전 등의 개발에 참여하여 에너지 공급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
- 민간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적극 유도·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원 확보
  - 해외자원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, 세제·금융 지원요건 완화 등 관련제도 개선
  - 주요 산유국 및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확대·강화

## 20. 에너지産業에 광범위한 시장경쟁을 도입

- 에너지산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에너지공급의 효율성 및 국민후생 증진에 기여
  - 韓電 독점의 전력산업을 발전부문부터 분할·민영화하여 소매부문까지 경쟁체제로 전환(2009년까지)
    - 국회에 상정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계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, 노조 등에 대해 지속적 설득
  - 가스産業도 도매부문부터 단계적으로 경쟁도입(2002년까지)
    - 구조개편이전에 전국망을 완성하고, 가스인프라 중복투자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한 공동이용방안 강구
  - 송유관공사(2000년 하반기), 지역난방공사(2001년까지)는 지분매각을 통해 민영화
- 정유 등 독과점 시장지배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도 철저한 공정경쟁의 관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 질서확립
  - 공정위, 국세청 등과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감독체제 운용
  - “국내유가평가모형” 연구를 조속완료하여 국내유가의 적정성 검증
  - 국내 석유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도입을 촉진
    - 또한, 에너지분야 상거래를 APEC 회원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(10월 APEC EWG 회의시 Task Force 구성에 대해 회원국 등의 획득)



## 21. 고유가시대에 대응한 강력한 에너지절약 추진

-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의 강력한 추진
  - 민간부문의 실천중심의 에너지절약운동 활성화
    - 적정냉난방온도유지, 대중교통이용, 10부제운행, 고효율제품구매운동 등 실천지향적(Action-Oriented)인 프로그램개발·추진
  - 에너지절약시민연대(2000. 6 결성)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
    - 2002년까지 에너지소비 10%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 전개
  - 우수사례 발굴 포상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유도
    - 녹색조명 아파트 경진대회(11월) 등
-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 및 에너지소비행태 변화 유도
  - 전국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의 확산
    - 지역별 에너지절약 사업설명회, 고효율기기비교전시회, 에너지절약 간담회, 계몽강연회 및 가두캠페인 등 개최
    - 범국민적, 범사회적 소비절약운동으로 승화
  -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전개
    - 주요일간지 기획보도 및 공익광고 제작
    - 국정홍보처, 행자부 등과 협조하여 전광판, 반상회보 등에 에너지절약홍보 지속 추진
  - 에너지절약시범학교, 청소년 봉사단 운영 등 조기교육 실시 및 산업체,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·교육 강화

## V. 실행 계획

- 본 자료에서 제시된 「산업·무역·자원정책」의 주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「100대 실행계획」(세부 지침과제)을 수립·시행
- 「100대 실행계획」별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차질없이 실천
- 경제5단체, 업종별 단체, 산업·기술관련 연구소와 소관 분야의 업무를 분담하여 민관 합동으로 총력 추진
- 새로운 산업·무역·자원정책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각 경제주체의 공감대 확산